

정부의 허구적 경제정책

2024. 12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이양승 교수

대한민국 국회

차

1 장 서론.....	3
-------------	---

제 2 장 ‘유사이론’ 소득주도성장론

1. ‘ ’ 경제학.....	6
2. ‘로빈슨 크루소’ 경제일기.....	10
3. 경제성장 모형.....	11
4. 최저임금 인상문제.....	14
5. 포드의 ‘효율임금’ 이론.....	16
6.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연구.....	18
7.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20

제 3 장 부동산 정책

1. 자산기반투표 가설.....	22
2. 정부의 전략적 사고.....	24
3. 종부세 강화와 임대차3법.....	26
4. 고의적인 ‘사다리 치우기’.....	28
5. 정책 비일관성과 지역 간 자산격차 극대화.....	30
6. 중국인 ‘집주인’과 한국인 ‘지옥고’.....	32
7. ‘공간 양극화’: 몰림과 쏠림의 소용돌이.....	34

제4장 노동 정책

1. ‘정규직 특별전형’.....	38
2. ‘알박기’ 공공기관장들.....	41
3. 역선택 실현.....	42



4. ‘나라’, ‘가족회사’ 선관위, ‘끼리끼리’ 네트워크.....	44
---------------------------------------	----

5장 정보왜곡: 국가통계조작

1. 정보의 중요성.....	48
2. 감사원의 감사결과.....	51
3. 청와대가 관리한 ‘통계치’.....	53

제6장 기타 ‘역주행’ 정책들

1. ‘검수완박’과 사회적 신뢰 상실.....	56
2. 반기업 정책.....	59
3. 정책적 지역차별.....	61
참고문헌.....	64



1 장 서론

‘이념 비대칭’ 심화: “새는 좌우로 난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이념 비대칭’ 상태가 심화되고 있음. 게임이론 시각에서, ‘독재’는 한 정당만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한 정당의 ‘교섭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사라지는 것임. 시스템은 ‘동적 내쉬 균형’을 표상함.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체제 붕괴임. 과도한 정치 편향성이 시스템 부재 그리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한국의 정치 편향성을 극대화시킨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허구적 정책에서 있음.

- 체제경쟁력: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체제경쟁력임.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은 부국의 체제경쟁력을 강조했음. 그 바탕은 법치에 기반한 제도와 시스템임. 선진국의 공통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임. 현재 한국은 ‘이념 비대칭’과 정치편향성이 심화되고, 국가정체성을 잃어 가며,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보이지 않는’ 체제변혁: 문재인 정부 정책의 근간은 포퓰리즘과 ‘체제변혁 지향 메커니즘’으로 보임. 소득주도성장은 주류 경제학계에서 제대로 검증조차 된 적 없으며,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자산 격차를 더 크게 해 수도권 쏠림 현상 즉, ‘공간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음. 집값 대폭 상승과 전세대란을 일으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음. 본문에서 논의하겠지만, ‘자산기반 투표’ 이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정책은 한국의 정치지형을 크게 바꿨을 것으로 보임.
- 대중은 포퓰리즘의 해악을 단순히 ‘재정 낭비’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음. 포퓰리즘은

‘ ’이어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붕괴로 이어임. 지배전략이란 상대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되는 전략임. 예를 들어, ‘A’정당과 ‘B’정당이 정책 경쟁을 할 때, ‘A’가 ‘폐주기’ 전략을 택하면 ‘B’도 ‘폐주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음.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인기를 잃게 되기 때문임. 만약, ‘A’가 ‘폐주기’ 전략을 택하지 않으면, 그때 ‘B’가 ‘폐주기’를 택하면 더 큰 정치적 인기를 누릴 수 있음. 따라서 ‘B’입장에서는 ‘A’가 ‘폐주기’를 하건 말건 무조건 ‘폐주기’를 택하는 게 최선전략임. ‘A’도 전략적 사고를 하기에 ‘폐주기’가 지배전략임을 파악함. 따라서 ‘A’와 ‘B’가 정책 경쟁보다 ‘폐주기’ 경쟁에 돌입하게 됨.

- 한 정당이 나서서 ‘폐주기’를 시작하면, 그 나라에선 정권이 바뀌어도 ‘폐주기’를 고수할 수밖에 없음. 다음 정부가 ‘폐주기’를 자제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음. 소신과 양심으로 ‘폐주기’ 자제를 주장하는 이는 대중의 돌을 맞아야 함. 그렇기에 모두가 포퓰리즘에 동조할 수밖에 없음. ‘포퓰리즘’은 매우 저속한 정치기술임.
- 한 정당이 시작한 ‘폐주기’는 필연적으로 ‘폐주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은 ‘바닥을 향해 질주’를 하게 됨. 결국 그 나라 경제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음. 베네수엘라가 한 사례임. 중남미 나라들은 원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지만, ‘빈자’를 위한다는 좌편향 정책 즉, 포퓰리즘이 그 나라를 ‘빈국’으로 만들고 말았음. ‘빈국’에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역설적이게도 ‘부자’들이 아니라 ‘빈자’들임. 나라가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 때문임. 포퓰리즘은 ‘지배전략’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반드시 망하게 함.
-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모든 게 이항대립 구도가 됐고, 시장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말았음. 시장은 본래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의 장인데 지금 한국의 시장들은 이익단체들이 목청 높이는 정치의 장이 됐음. 규제 때문임. 그 이익단체들은 편향 정치인들



등에 업고 교섭력을 키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그러한 편향적 규제로 인해 가장 피해자들은 서민들임. ‘자산불평등’과 ‘세대격차’가 극심해지는 이유임.

-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말은 맞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바로 법치주의 실현과 시장 시스템 회복밖에 없음. ‘정보의 대칭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담당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한국은 과도한 ‘쏠림’ 현상이 보편적임. 국회 내 정당 간 의석수 분포도 비대칭이 심각함. 소득 양극화에 이어 공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됨.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음. 문재인 정부 5년은 ‘정책 역주행’의 시대였음.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는 고의성마저 엿보임.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역주행’을 분석하고 그 허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2장 ‘유사이론’ 소득주도성장론

1. 경제학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 즉, ‘소주성’임. 주지할 건, ‘소득주도성장’은 주류 학계에서 제대로 검증된 적 없어 개인적 신념 또는 ‘유사이론’이라고 볼 수 있음. 폴란드 경제학자 칼레츠키¹⁾ 등 일부 비주류 학자들이 그와 같은 방식의 성장을 주장한 바 있으나 실증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음. ‘유사이론’ 소득주도성장을 국가의 정책기조로 삼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외신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실험’이라고 표현한 이유임.

- ‘소주성’은 기본 개념부터 분명치 않음.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성장’이란 국민소득 증가를 뜻하기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소득주도소득증가’정책이라고 풀이되기에 이상함. 즉, 정책의 명칭 자체가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득이 높여진다는 뜻이 되어 순환논리이고 코믹함.
- 검증된 적 없는 유사 과학을 도입, 정책 참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구 소련시절 농업을 파괴시킨 트로핌 리센코의 사례와도 비슷하다 할 수 있음. 트로핌 리센코는 유사과학 ‘용불용설’의 신봉자였음. ‘용불용설’이란 리마라크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자주 쓰는 기관은 발전하고 쓰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는 가설임. 그 직관은 인정되지만, 과학인 진화론과는 다름.
- 용불용설에 따르면,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환경에 적응한 결과 획득된 형질 즉, ‘획득

1) 1899 폴란드의 우치에서 태어난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랑게, 브루스와 함께 폴란드의 사회주의의 경제계획과 성장전략에 대해 제안을 제시했으며 사회주의 경제 연구와 교육에 집중했음.

'이 다음 세대에 유전,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함. 하지만 현대 생물학에선 부모대에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이 유전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봄. 예를 들어, 부모가 학습을 통해 지식인이 됐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높은 지능이 유전되는 게 아님. 독일 학자 바이스만이 생쥐 꼬리를 계속 자르고 그 생쥐의 후손들 꼬리의 길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음을 밝힘. 신다윈주의는 획득 형질의 유전을 부정함.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실은 환경압으로 인해 그 획득 형질을 만드는 데 유리한 유전자가 긴 시간을 통해 많아지는 현상 즉, '자연선택' 메카니즘을 통해 진화가 이뤄지는 것임. 만약 '용불용설'이 맞다면 진화가 매우 빠를 수밖에 없음.

- 리센코는 그렇게 유사과학에 가까운 '용불용설' 개념을 육종학에 적용, 소련의 농업을 수십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²⁾ 이와 비슷하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유사 이론을 도입해 한 국가를 상대로 경제 실험을 한 것과 비슷함. 그 결과는 소련의 사례처럼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후진화시켰음.
- 그 전개 양상도 비슷했음. 당시 과학에 근거, 리센코의 이론에 반대하는 이들은 소련에서 반동분자나 파시스트로 몰려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음. 그에 따라, 소련 농업을 상대로 유사 과학에 근거, '실험'적 정책이 강행되었던 것임. 한국도 비슷하게 소주성 정책에 반대하면 신자유주의자, '뉴라이트' 학자, 또는 '적폐'로 몰리기도 했음. 술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주성 정책은 강행됐음.

2) 지지자 리센코는 한 세대의 종자에 춘화처리를 해 놓으면 그 다음 세대부터는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심어도 된다고 주장했음. 문제는 그 주장이 아니라 소련 정부가 검증 없이 그 가설을 그대로 농업 프로젝트에 적용했다는 것임. 육종학 연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 우크라이나 대기근(1933)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련 정부는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바빌로프의 유전학보다 리센코의 이론이 매혹적이었음. 하지만 농업체제의 비효율성과 리센코의 영터리 이론이 상호작용하며 소련 농업을 후퇴시켰고,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게 됐음.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농업수출국임. 유사과학의 폐해를 보여주는 예시임.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계의 ‘용불용설’로 볼 수 있음. 용불용설이 진화 메카니즘을 설명할 수 없듯,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성장 메카니즘을 설명할 수 없음. 한 경제에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처럼 두 종류의 시장이 존재함. 생산요소는 크게 자본과 노동으로 구분됨. 요소투입을 통해 생산이 이뤄짐. 생산물의 가격은 요소투입 비용에 의해 결정됨. 임금은 요소소득임. 일반균형 시각에서 보면,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임.

- 모형을 통해 후술하겠지만, 경제성장은 생산량 증가를 의미함. 생산량 증가를 위해선 요소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함. 요소투입을 늘리면 비용도 증가함. 생산성이란 주어진 요소투입을 놓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생산기술 진보가 이뤄지면 요소투입량은 그대로인 반면 생산량이 증가함. 그 경우, 노동의 한계생산도 증가함.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진보를 강조하는 이유임. 기술진보는 인적자본의 연구개발(R&D)에서 나오고 인적자본은 교육에서 나옴.
- 문재인 정부의 ‘소주정’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었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주로 자영업자들의 생업 현장임. 임금 상승은 요소비용 상승을 의미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음. 즉, 생산량이 줄어듦. 만약 생산량이 줄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이윤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이전됨. 그 경우,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누는 방식만 달라지는 것이기에 경제성장이 아니라 인위적인 ‘소득재배분’이라고 해야 함. 문 정부는 프레이밍 효과를 노려 ‘소득재배분’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임금상승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음. 임금상승은 요소소득이 증가한 결과이고, 요소소득 증가는 생산성이 향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오히려 임금상승은 생산비용 상승을 의미해 생산활동이 저하될 수 있음.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음. 즉, 생산이 없으면 고용도 없고 임금도 없는 것임. 그렇기에 고용이 많아지려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

-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많아지고, 고용이 많아지면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면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다시 고용이 많아지고, 고용이 많아지면 소득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더욱 높아지면 소비가 더욱 많아짐. 그게 선순환임. 그렇게 선순환이 진행될수록 모든 게 많아지고 수준이 높아짐. 그런데 ‘착한 정부’ 되겠다고 그 단계에서 ‘소득’만 인위적으로 높이자는 게 바로 ‘소주성’임.
- 따라서 ‘소주성’은 ‘용불용설’처럼 ‘유사이론’으로 볼 수 있음. 그 ‘유사이론’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로 삼은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그 ‘소주성’에 대해 주류학계를 상대로 검증 요구도 하지 않았음. 특히 김동연 현 경기지사는 당시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그 영터리 경제 정책의 총책임자였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는 ‘소주성’ 정책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음. 이는 책임 유무를 떠나서 ‘소주성’이 영터리였음을 인정하는 셈임.
- ‘소주성’ 정책의 허구성 파악을 위해 다음 장에서 모형을 통해 ‘경제성장’ 기본 개념을 제공함.



2. ‘크루소’ 경제 일기

소설 ‘로빈슨 크루소’는 경제성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음. 무인도에서 크루소의 삶은 전형적인 ‘1인 자급자족경제’로 볼 수 있음. 즉, 크루소가 그 무인도 내에서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임. 그렇기에 그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일을 구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함. 그가 하루동안 먹을 음식의 양은 그가 투입하는 시간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됨.

- 음식을 먹는 게 소비임.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하는 게 저축임. 크루소가 먹는 음식의 양은 그가 선택한 노동시간에 달려 있음. 그 노동시간에 따라 휴식시간도 정해짐. 휴식시간을 늘리면 편한 대신 그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도 줄어듦. 반대로 노동시간을 늘리면 더 많은 음식을 먹는 대신 피로로 인해 행복감도 줄어듦. 휴식을 더 취하면서 동일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뜻임. 즉, 어느 한 쪽을 늘리면 반드시 다른 한 쪽을 포기해야 함.
- 크루소가 노동을 통해 얻는 게 바로 산출임. 산출량은 노동시간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크루소가 고기잡이를 위해 작살 또는 그물을 개발할 수 있음.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 수 있음. 그 경우, 크루소가 같은 시간의 일을 하더라도 산출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그렇게 수렵과 채집 과정이 거듭되며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된 결과 생산성이 향상됨. 섬의 생태 환경도 산출량에 영향을 줌. 알맞는 강수량과 일조량이 있으면 과일 수확이 더 많아지고, 바다 수온에 따라 그 섬 근처 물고기 수도 많아질 수 있음.
-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도 크루소의 섬과 비슷함. 크루소가 활용하는 작살 그물 사다리 같은 도구들은 그 국가의 산출량 증가를 위해 ‘물적 자본’ 역할을 함. 크루소가



수확하며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익힌 경험과 숙련도는 ‘인적 자본’ 역할을 함. 강수량, 일조량 그리고 수온 등은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으로 작용함.

- 크루소가 먹거리를 저장하는 건 저축임. 저축은 소비를 자제하는 결과임. 그 날의 소비를 자제한 결과 그 다음날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음. 시간도 아낄 수 있음. 그 시간을 ‘투자’해 더 좋은 작살과 그물 그리고 더 높은 사다리를 만들 수 있고, 사색을 통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음. 즉,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축적되고 크루소는 미래에 더 많은 산출을 통해 더 많은 소비를 즐길 수 있음.
- 크루소는 식량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기에 더 많은 시간 확보가 가능함. 그 시간과 자본을 활용, 자신이 사는 무인도를 더욱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음. 무인도가 선진화되는 것임. 그렇듯 기본적으로 저축과 투자가 경제성장의 바탕이 됨. 크루소의 무인도 생활을 통해 익혀진 경제 개념들을 활용, 아래와 같은 경제성장 모형을 만들 수 있음.

3. 모형

-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을 논증하기 위해 ‘로빈슨 크루소’ 경제에서 등장한 몇 가지 개념들을 다시 정리해 경제성장 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재화와 서비스: 돈 주고 사는 건 재화와 서비스 둘 중에 하나임. 크루소처럼 수렵과 채집을 하고 요리를 해야 함. 무인도에서 나뭇잎 또는 야생동물의 가죽을 이용, 옷도 만들어야 함. 집도 지어야 함. 국가 경제는 로빈슨 크루소가 사는 무인도를 확장하면 됨. 땅이 더 넓고 사람이 더 많고 자원들이 더 많고 다양함.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쓰며, 영화 또는 야구 관람도 즐김. 이렇듯 의식주 관련 또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게 재화와 서비스임. 재화는 파일, 물고기, 옷, 컴퓨터, 자동차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서비스는 영화 또는 야구 관람 등 형태가 없지만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함.

- 효용: 인간이 재화와 서비스 소비를 통해 느껴지는 행복감을 의미함. 파일을 먹고, 컴퓨터를 쓰고,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효용임.
- 소비재: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함. 한번 사용되면 생산에 기여할 수 없음.
- 자본재: 크루소가 쓰던 작살, 그물, 사다리처럼 소비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를 말함. 기계와 설비도 포함함. 경제원론에서 말하는 생산요소 자본은 원래 자본재를 의미함. 하지만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념이 등장하며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함.
- 인적자본: 크루소가 얻은 경험과 지식 등이 해당됨. 노동의 양보다 노동의 질이라고 볼 수 있음. 인적자본의 산실은 교육임.
- 잠재 GDP: 잠재산출량이라고도 하는데 그 국가 내 가용 자원, 노동과 자본, 모두를 활용해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 명목 GDP: 명목 GDP란 그 나라의 최종생산물에 가격을 곱한 것임. 예를 들어, 그 나라가 한 해 동안 쌀 100 포대 사과 100 상자를 생산했고, 쌀 1 포대 가격은 1000원 사과 1상자 가격은 500원이라고 가정함. 이때, 그 나라의 그해 명목 GDP는 $100 \times 1000 + 100 \times 500 = 100,000 + 50,000 = 150,000$ 원이 됨.



실질 GDP: 가격을 빼고 오직 산출만을 기준으로 함. 즉, 쌀 100 포대와 사과 100 상자를 의미함.

-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을 따지려면 기준연도가 필요함. 이때, 기준연도의 물가를 바탕으로 실질 GDP를 계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위의 경우에 쌀 생산이 120 포대로 늘고 사과 생산이 110 상자로 늘었다고 가정하고 쌀 가격과 사과 가격이 두 배 상승했다고 가정함. 이때 명목 GDP는 $120*2000 + 110*1000 = 240,000 + 110,000 = 350,000$ 이 됨. 실질 GDP를 계산할 때는 가격변동을 고려치 않음. 따라서 실질 GDP는 $120*1000 + 110*500 = 120,000 + 55,000 = 175,000$ 이 됨. 그렇게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함. 즉, 경제성장은 생산능력의 신장을 뜻함.
- 생산능력 신장은 생산 기술진보, 자본축적 또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 현대에 들어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이 많이 강조되는데 그 질적 향상은 주로 교육을 통해 발현됨.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를 떠올리면, 고기 잡는 방법이 노하우 축적을 통해 향상되어 주어진 시간 안에 잡는 고기 수가 많아지는 것임. 크루소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물고기를 더 쉽게 잡기 위해 작살과 그물을 만듦. 그게 물적자본의 축적임. 즉, 물적자본이 많아지고 그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됨. 따라서 로빈슨은 더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됨. 그에 따라 어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기존 농업 생산량에 더해 전체 생산량도 증가함.
- 이상이 경제성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임. 강조하지만 경제성장은 주로 생산능력 신장을 의미함. 생산능력 신장을 위해선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축적이 필요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축적은 시간과 자원을 소요함. ‘자원’은 ‘자본’과 다름.



4. 인상 문제

하지만 문 정부는 생산능력 신장을 도외시하고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음.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8년 7530원(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이었음. 가장 가파른 상승세는 문재인 정부 때 였음.

- 2018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³⁾를 내고 2019년 2020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계속되면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실제 그해 발표된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⁴⁾ 이는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
- ‘8월 고용동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가 3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 ‘고용참사’가 나타났음. 또한 실업자는 11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천명 늘어,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음.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3%p 하락,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도 10.0%를 기록해 크게 상승, 8월 기준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음.⁵⁾

3) , 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KDI Focus.

4) 한국일보, 2018년 8월 17일 기사 참고, “7월 취업 증가 5000명… 고용 대참사 현실화”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171386330622>

5) 동아일보, 2018년 9월 12일 기사 참고, “‘고용 재난’ 8월 취업자 증가 고작 3000명…실업자 IMF 이후 최악” .

<https://web.archive.org/web/20180915122307/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80912/91943060/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의 자영업은 비숙련 외식 사업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사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하지만 이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 문제를 일으키게 됨.
- 최저임금 상승이 당장 비숙련 근로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포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비숙련 근로자들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음. 그 경우, 가장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비숙련 근로자가 될 것임.



5. ‘효율 임금’ 이론

‘효율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노동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을 말함. 즉, 효율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이직 유인이 줄어들 뿐 아니라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포드 자동차 회사 설립자 헨리 포드(Henry Ford)는 1914년에 자사 근로자들에게 당시 일당 두 배 만큼을 지급했는데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음. 당시 시대적 배경은 노동 수요가 많아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높았기 때문에 ‘효율 임금’이 등장했음.
- ‘효율 임금’ 이론 시각에서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한국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임금수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쉬운 설명을 위해 세 직업군 A, B, C가 있고, A 직업군의 숙련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B 직업군 그리고 C 직업군이라고 가정함. A 직업군은 시간당 5000원을 받고, B 직업군은 4000원, C 직업군은 3000원을 받음. 이때 C 직업군의 시간 당 임금이 ‘최저 임금’이 됨. 정부가 C 직업군 종사자들의 소득을 올려줄 목적으로 시간 당 임금을 4000원으로 올려준다고 가정함.
- 그 경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B 직업군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보다 쉬운 근로를 원하기 때문임. 따라서 B 직업군 종사자들이 다니던 직장을 떠나 C 직업군으로 이직할 유인을 갖게 됨. 그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B 직업군의 시간 당 임금도 인상해야 함. B 직업군의 시간 당 임금이 인상되면 A 직업군 종사자들이 다니던 직장을 떠나 B 직업군으로 이직할 유인을 갖게 됨. 그들의



막기 위해선 A 직업군의 시간 당 임금도 인상해야 함.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그 국가의 전체 직업군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게 함.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 물가 수준도 상승함.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함.
- 임금이 올라가면 원재료비도 모두 상승할 수밖에 없음. 재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물류 작업에도 인건비가 들어감.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효율 임금’ 이론에 따라 그리고 생산과 물류 과정 모든 단계의 임금이 따라 오르게 됨.
- 외식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하는 요인은 식재료비와 인건비임. 식재료비 상승은 그 수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임.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인위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부채질했음. 외식업계는 임대료 상승보다 인건비 상승이 더 치명적일 수 있음. 인건비 상승은 식재료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침.
- 인건비 상승은 외식업체의 영업 이익률을 떨어뜨림. 따라서 외식업체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원가절감을 위해 질 낮은 재료를 쓰거나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음. 가격 인상은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신장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는 허구임.
- 최저임금 생활 근로자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확대시킬 만큼 충분한 소비 여력이 있을 수 없음. 만약 문재인 정부 주장대로 그렇게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면 역설적이게도 굳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 없다는 논리가 됨.
- 사업자 시각에선,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추가적인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그 임금 인상분을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쓴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앞서 살펴본 데로 최저임금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음.

6. 크루거의 실증 연구

-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⁶⁾가 과거에 있긴 함. 하지만 그 논문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뚜렷 함. 그 논문은 미국의 뉴저지 주의 사례를 분석함. 미국에선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음.
- 1992년 4월 뉴저지 주는 최저임금을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수준인 4.25달러보다 더 높은 5.05달러로 책정했음. 반면 뉴저지 주의 바로 옆에 위치한 펜실베니아 주는 최저임금을 4.25달러 수준을 유지했음. 자연스럽게 정책 실험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임. 프린스頓 대학교 카드 교수와 크루거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인 1992년 2~3월과 인상 후인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패스트푸드점들을 대상으로 고용상황을 분석했음.
- 그들의 분석 결과는 다소 의외였음. 해당 기간 동안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1개 업체당 근로자 수가 23.33명에서 21.71명으로 약간 감소한 반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던

6) Card, David, and Alan B. Krueger,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1994, 772–793.



주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20.44명에서 21.03명으로 증가한 것임. 그 연구를 계기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음.

- 먼저 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음. 분석 대상을 패스트 푸드점으로 한정한 것, 그리고 조사기간을 1년으로 한 것도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에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따랐음. 미국의 경우에는 주 별로 경제 상황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 뉴저지 주가 펜실베니아 주에 비해 경제규모가 많이 작기 때문에 외부 성 또한 크게 작용할 수 있음.
- 2008년 한국에서도 후속 연구가 있었음.⁷⁾ 2007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제도 변화에 주목, 수도권 지역 132개 단지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저임금제가 고용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음. 그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2007년에 임금은 10.9% 상승한 반면 고용은 3.5~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 상승은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날 때만 의미가 있음. 일반균형론 시각에서 보더라도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반영함. 하지만 문제인 정부가 추진했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은 생산성과 무관하고 보조금 성격이 강함.
- 국가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건 생산성 향상이지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없음. 보조금 지급은 도덕적 해이를 통해 오히려 생산성을 낮출 수 있음. 그리고 그 바탕은 세금이기에 누군가에게 비용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없음. 게다가 근로의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즉, 특정 직군을 향해서만 임금 인상 혜택이 돌아가면 다른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의 근로의욕이 감퇴될 것임.

7) , 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1권, 제3호, 1~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수혜를 입는 노동자들과 그들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움. 특히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성장 정책으로 인정하지 않음.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고 총수요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면 이는 경제학적 논리가 될 수 없음.

7. 최저임금 수준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낮지 않고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찾을 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따짐. 한국은 이미 2002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33.4%를 기록, 32.5%의 일본을 앞섰음. 그리고 2015년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50.4%를 기록, 13년 동안 무려 17%p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해 일본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9.7%에 불과 했음.
- 절대적인 최저임금 인상 폭은 김대중 정부는 평균 9%, 노무현 정부 평균 10.6%,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평균 7.4%였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최소 5% 이상씩 인상해왔던 것임. 그 결과 2015년에 이르러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임.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했어야 함. 하지만 오히려 연 13% 이상 가장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음. 그에 따라,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2.3%가 되어 이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 됐고 지금은 중위임금 대비 70%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 최저임금에 대해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음. 설령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연말 정산으로 대부분 환급 받게 됨. 예를 들어, 서유럽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평균 30% 이상의 높은 세율이 부과됨. 물가수준은 한국보다 1.5배 정도된다고 볼 수 있음. 미국과 캐나다의 물가수준도 매우 높음.

- 세금을 부과한 이후 가처분소득으로써 최저임금은 한국이 북미지역과 서유럽보다 그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더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음. 따라서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그 수준 격차는 더 커질 것임. 북미지역과 서유럽에선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음.



3장 부동산 정책

1. 투표 가설

자산에 따라 투표결정이 달라진다는 ‘자산기반 투표 (patrimonial voting)’ 가설이 있음. 계급투표 가설이 강조하는 전통적인 사회계급 지표(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 등) 보다 자산보유 정도가 정치적 태도나 투표행태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 자산기반 투표 가설은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소득보다는 주택과 같은 자산이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임. 그 가설에 따르면, 많은 자산을 소유한 유권자가 탈규제나 친기업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보유 자산이 많지 않은 유권자가 정부의 시장개입과 분배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자산기반 투표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도는 루이스백과 내두 (Lewis-Beck and Nadeau, 2011)였음.⁸⁾ 루이스백과 내두(2011)는 2008년 미국 대선을 대상으로 자산기반 투표의 유의성을 밝혔으며, 프레일과 루이스백(Fraile and Lewis-Beck, 2014)은 스페인 총선을 분석, 유권자의 자산 소유 규모가 증가할수록 좌파정당 지지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음. 자산기반 투표 관련 초기 연구들은 자료 수집이 쉬운 ‘주택소유 여부’로 자산을 측정해왔음. 최근 연구들은 자산 측정 변수가 보다 구체화 그리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임.

8) Lewis-Beck, M. S. and R. Nadeau (2011), “Economic voting theory: Testing new dimensions”, *Electoral Studies*, 30, 288–294.

Fraile, M. and M. S., Lewis-Beck (2014), “Economic vote instability: Endogeneity or restricted variance? Spanish panel evidence from 2008 and 2011”,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3(1), 160–179.



한국에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연구가 흔치 않고 부동산 자산과 정치적 성향 간 관계를 분석한 사례도 많지 않음. 자산이 많을수록, 또는 주택을 보유한 유권자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보이고 실제로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임.⁹⁾

- 한국은 ‘부동산 약탈국가’¹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자산이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큼.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상 보유한 부동산 자산 크기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결정됨. 그렇기에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크기가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투표 이론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정당을 지지하게 됨. 각 정당은 사회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지위를 갖는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자연스러움. 저소득 계층의 유권자들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좌파 정당을 지지하고, 고소득 계층의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득권 유지를 위해 우파 정당을 지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한국의 자산기반 투표 행태에 대한 연구는 손낙구(2010)¹¹⁾에 의해서인데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자가 주택 소유자와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당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을 더 높게 지지한 것을 밝혀냄.
- 주목할 건 최종호(2019)의 연구인데,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산과 소득이라는 구조적

9) Beckmann, P., B. Fulda, and S. Kohl (2020), Housing and Voting in Germany: Multi-Level Evidence for the Association between House Prices and Housing Tenure and Party Outcomes, 1980–2017, MPIfG Discussion Paper 20/6, Max Planck Institute.
(2019), “소득, 주택소유 그리고 투표선택: 19대 대선의 사례”, 비교민주주의, 제16집 1호, 189–221.

10) 강준만 (2020), “부동산 약탈국가”, 인물과사상사

11)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후마니타스 출판



상호 연동하거나 이념 성향에 매개되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힘. 한국 선거에선 이념 대립 그리고 지역감정 등으로 주택소유와 소득이라는 구조적 변수의 효과가 가려지기 쉽지만 투표 결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함.

2. 전략적 사고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두 번째 대책이었음. 종합부동산 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시도된 적 있었지만 실패한 바 있음.
- 그 실패의 원인을 놓고 여러 시각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거품임. 부동산이 주거목적보다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갑작스레 개정하면 게임이론 시각에서, ‘지대 창출’의 신호가 될 수 있음. 그에 따라 지대추구 경쟁이 격화되고 부동산 시장 내 ‘큰 손’들의 전략적 사고가 겹쳐져 자칫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임. 즉, 실수요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투기 유인이 강해질 수 있음.
- 9.13 대책의 주 내용은 전년대비 종합부동산세 인상폭 상한선을 기준 300%에서 200%로 인하하고, 주택 보유자들 일부에 대해 장기보유 공제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음. 그에 따라 종부세 개편 적용대상이 대략 27만 4,000명에서 21만명대로 20% 이상 축소되었음.
-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9.21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이 발표됐음. 9월 이후 본격화된 2018년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



. 그에 따라,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진되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억제되었음. 9.13 대책 이전까지 가격이 치솟던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도 그 대책과 함께 가격이 일부 하락했음.

- 지방 부동산 시장이 경색됐음.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됐음. 부산은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2018년 10월 등록 임대주택이 55%나 급감했음¹²⁾.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자 부동산 취득세를 주 세입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재정 축소 문제가 발생했음.
- 2019년이 시작되자,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업지공시가격 등을 대폭 인상했음.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기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공시지가 인상은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음. 공시지가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4대 보험료에도 연동되기에 국민의 실질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됨.
- 문재인 정부에서 내린 공시지가 개편에 국토부 개입 논란이 있었음.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을 최종 산정하고 결정하는 건 국토부 장관의 권한임.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은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고, 세금과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주장.
- 공시지가 파동이 확산.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감정평가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그 지침의 일부가 삭제됐다는 언론 보도¹³⁾가 나옴. 이후 공시

12) 2018년 12월 28일 기사 참고,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부산 4곳은 해제” , hankookilbo.com/News/Read/201812281091019105

13) 조선일보 2019년 1월 4일 기사 참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들이 공개되고, 국토부의 부당개입 논란으로 번짐. 정부 지침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동하는 공시지가 제도 자체를 두고 문제가 제기됨. 공시지 가의 큰 폭 인상에 따라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주택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노인들에게 어려움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부동산 시장 규제가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는 주택 총공급을 늘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발상을 함. 문제는 서울 집값이 단순하게 수급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임. 한국에서 주택 총공급이 늘면, 적절히 인프라가 확충됨. 그에 따라 그 신주거지의 주거환경이 좋아져 사람들이 몰리고, 연쇄 인구이동이 발생함. 지방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동함. 지방소멸이 가속화됨. 문재인 정부 정책은 전형적인 ‘거꾸로’가는 ‘역주행’ 정책임.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함. 다주택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청와대 권고도 있었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관료는 거의 없었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을 못 참는다’라는 격언이 실천된 것임. 그 해 4월 총선 정국이 다가오자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개발해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 5만호 주택 공급을 계획함. 표를 의식한 ‘표’풀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3. 강화와 임대차 3법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 종부세와 보유세를 대폭 인상했음.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됐음.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거주하게 해 최장 4년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가격에 상한을 두는 임대료 상한제 법안이 통과됐음.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됨. 전세 물량 감소로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대란이 발생했음. 즉, 주택보유자들이 전세를 내놓기보다 실거주를 하거나 주택 매도에 나선 게 이유였음. 임대차 3법은 최악의 전세난을 가져왔음. 엉터리 정부정책이 무주택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사례임.

- 전세난이 지속되자 무주택자 서민들은 힘들어도 빚을 내 집을 사자는 쪽으로 돌아섬. 그러자 이번엔 중저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집값이 폭등. 특히 서울 근교 고양, 김포, 파주, 부산, 울산 등 비규제 지역에서 사상 유례 없는 집값 폭등이 나타남. 결국 임대차 3법이 일으킨 전세난이 주거 난민들을 양산하고 그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면서 전국 집값이 요동침.
- ‘핀셋’ 규제가 불러온 역풍선 효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값이 대폭 상승했고, 한국의 아파트값은 통계 작성 이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음. 정책 설계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할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임.
- 임대차 3법으로 주택 매매가가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벌어지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240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선언. 이는 문재인 정부 세계관의 일단을 볼 수 있게 함.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이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임대하기를 원했던 것임.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공공임대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다는 의견도 있음. 하지만 문재인 정부 와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공공임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음.
-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급정책이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엔 공공임대 물량도 많았지만 모든 세대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자”고 발언했는데 그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음. ‘주거 사다리’를 떠나 전세대란을 일으켜 무주택자들을 ‘지옥고’의 삶으로 몰아간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임.

4. ‘사다리 치우기’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음. 시야를 넓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례를 찾아보아도 문재인 정부만큼의 정책 실패를 찾기 어려움. 당시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전 원내대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부와 국민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탈원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반성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향했음. 하지만 실행된 정책들을 보면 실효성도 없거니와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켰음. 특히, 임대차 3법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졌음. 문재인 정부를 기점으로 한국에선 새로운 자산가 계층이 등장하는데 바로 주택을 보유한 ‘강남 좌파’임.
-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 6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87%,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값은 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¹⁴⁾ 이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높은 기록을 세워 ‘집값 상승’에 있어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한 것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고,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음.
- 2020년 10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단 3년 만에 6억에서 10억으로

14) 2021년 6월 10일 기사 참고, “서울아파트값 文정부 4년간 87% 상승…참여정부보다 높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50079>



지방 광역시 집값도 마찬가지였음.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어떤 경우는 집값은 한 달에 5억 이상 오른 적도 있었음. 다른 광역시들도 한 달에 1억이나 올랐음. 특히 압구정동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 4년 만에 무려 40억 가까이 올랐다고 함.¹⁵⁾ 2022년 2월 국민은행의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무려 12.6억 원을 돌파해 문재인 임기 초반보다 약 두 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음.¹⁶⁾

- 문재인 정부의 핀셋 규제가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든 것임.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그 와중에 문재인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4년간 20% 이상 상승했다고 함.¹⁷⁾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부추겨진 결과 한국의 서울 아파트 값이 도쿄, 런던, 맨해튼 등의 집값을 추월하게 됨.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에 서울은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음.
- 전형적인 거품 현상임. 기업투자와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부동산 거품이 더 심해진 것임.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월급 저축을 통해 자기 소유 주택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30~40대가 자가 주택 구매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신혼부부들 역시 거주난에 시달려 출산율 저하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202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까지 감소했음.
- 집값을 못 잡았던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음.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때, 전문가들에게서 의견을 청취하고 학자들에게

15) 2020년 9월 28일 기사 참고, “서울 아파트값 평균 10억원 시대…2년 만에 2억2천만원 ‘껑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11720>

16) 연합뉴스 2022년 2월 28일 기사 참고, “서울 아파트값 강남권 15억원·강북권 10억원 돌파”,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8084200003?input=1195m>

17) 한국경제신문 2022년 3월 31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참고, 文정부 공직자 재산 4년간 20% 불었다…법제처장 350억 ‘1위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33028241>



조언을 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 넘게 정책실패를 거듭했다는 게 해하기 어려움. 정책 실패의 고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문재인의 정책은 투기세력으로 하여금 집을 못 사게 했던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한 결과로 이어졌음. 다주택자에게 가한 보유세 상승도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됐음.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월세로 전환 해 보유세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집이 없거나 또는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음.
- 그렇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것임.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몰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좌파정부의 평판을 크게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음. 특히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실망감이 컸음.

5. 비일관성과 지역 간 자산격차 극대화

- 2017년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졌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지만, 이미 언급한대로 서울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음. 소득이 많고 현금이 풍부한 강남 자산가들은 대출규제에 영향 받지 않고, 양도세 중과 역시 ‘버티기’를 고수하면 손해 볼 게 없었음. 초강력 규제라는 8·2 대책이 있고 6개월이 지나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의 오름폭이 더 심화됐음. 강남뿐 아니라 노원, 도봉, 중랑, 은평, 마포, 성동 등 강북 지역 아파트 값도 동반 상승했음.¹⁸⁾

18) 2018 1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참고, “[기자수첩] 실패한 부동산 정책 되풀이가 걱정되는 이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1577.html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방의 아파트 값은 하락했음. 8.2 대책 이후 경남 아파트 매매가는 0.17%, 충남은 0.18%, 충북 0.20%, 경북은 0.15%, 그리고 부산은 0.06% 각각 하락했다. 규제만 많아지고 서울 아파트 값을 대폭 상승하고, 지방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임. 그에 따라 부의 양극화 공간 양극화도 더욱 심해졌음.¹⁹⁾

-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과 재개발, 재건축 지원, 주택담보대출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음.²⁰⁾ 대신 8년 동안 임대료 상승을 정부 규제인 5% 이내로 제한했음. 그렇게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74,000여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며 홍보했음.
- 2018년 9월 2일 김현미 장관은 임대주택 전환 인센티브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음. 해당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받는 인센티브를 캡 투자를 위해 사용된다는 이유였음. 하지만 진짜 이유는 2018년 8월 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새해예산안에 따라 471조라는 ‘슈퍼 예산’이 필요해지면서 부족한 세수를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서 받아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임.
- 그 정책은 고작 8개월 만에 뒤집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일관성 면에서 큰 흠결을 남겼음.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도 큰 비용이었음.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들과 등록을 준비하는 이들은 크게 반발했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 일변도였고 임대주택 정책을 뒤집어 정책 일관성 면에서 큰 문제를 드러냈음.

19) 2018 1월 17일 국민일보 기사 참고, “‘장기 플랜 카드’ 검토한다지만… 집값 잡기는 요원”,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5720>

20) 2017년 6월 26일 연합뉴스 기사 참고,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 유도…비과세 등 인센티브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5035100003>



6. ‘집주인’ 과 한국인 ‘지옥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 황당한 건 그 규제가 한국인에게만 적용됐다는 사실 때문임.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거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는 한국 내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외국인이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면 규제 대상이 아니었음. 그 결과, 2020년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사재기가 이슈로 떠오름.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대가 주 타깃이었음.

-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타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 사재기에 나선 것임. 2020년 외국인들의 한국 건축물 매입은 사상 최대치인 2,273건까지 상승했음. 2020년 8월에는 강남3구에 133건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신고 됐음. 외국인은 외국에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도 한국에서 집을 살 때 한국인과 달리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았음.
- 2020년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매입한 부동산 건수는 13,788건으로,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입건수 26,836건의 51.3%에 해당함. 특히 중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략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했음. 한국인들에게 가해진 규제가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몰고 왔음. 그에 따라 서민층은 서울에서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렵게 됐는데 경제학자들은 그 사실을 외면함.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



가격이 더 오르는 경향이 있고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였음. 그들은 입으로 ‘집값 안정’을 외치지만 정책은 반대로임. 좌파는 정책을 만들 때 일차원적 사고만 하는 경향이 있어 집값을 잡겠다고 나설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것임.

- 공급부족으로 금값이 오르니 금을 사지 말라고 하고, 소중한 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갖자는 논리로 금 보유자들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 봄. 그 경우, 금에 관심 없었던 이들도 금이 자신 증식 수단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임. 금 보유자들은 금을 더욱 붙잡고 있으려 할 것이기에 시장 내에 금 공급이 더욱 줄어듦. 그 결과 금값은 더욱 치솟게 됨.
- 금 보유자도, 금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잘못은 없음. 그 잘못은 엉터리 정책을 통해 시장시스템을 붕괴시킨 정책 설계자 즉, 정부에게 있음. 문재인 정부 때,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서울에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 투자가 성행했음.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음.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하락세로 꺾여 그들은 큰 손실을 감수하는 중임.
- 고금리가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 이 있음. 하지만 빚을 얻어 자산 증식 목적으로 서울 부동산에 투자한 이들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움.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면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됨. 청년들에게 ‘영끌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하게끔 만든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음.
- 우스개 같지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시장규제를 가할 게 아니라 차라리 부동산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집을 사라고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설 때마다 민간에선 ‘집값 잡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정부가 저토록 나설까’하는



즉, 이계적 사고(second-order thinking)를 통해 투기 또는 지대추구 욕망을 더 자극할 수 있음. 게임이론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그러한 정책 선언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Signal) 즉,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임.

-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냈음. 무엇이건 희귀해지면 값이 오르는 게 경제학의 상식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설 때, 더 많은 이들이 집 없는 설움에 직면할 때, 주택은 자산시장에서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음. 집값이 내려가려면, 사람들의 집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야 함.
- 정책 실험을 제안함. 금이 너무 비싸니까 금 보유자들로 하여금 금을 팔라고 하면 정부가 나서면 금값이 오히려 치솟을 가능성성이 있음. 따라서 자산증식 수단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격을 잡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이는 ‘거꾸로 가는’ 정책일 수밖에 없음. 그러한 정부가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수하면, ‘전략적 사고’를 통해 집값 상승을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음.

7. ‘양극화’ : 몰림과 쏠림의 소용돌이

- 문재인 정부 시절 진일보한 건 바로 ‘몰림과 쏠림’의 정도임. 양극화가 심화된 것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음.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문재인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통계조작까지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 현상은 뚜렷함.
- 통계조작 없이 정보가 그대로 공개됐다면, 양극화 현상은 더 충격적이었을 것임. 모든 게 서울권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임.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수



없음. 지금 한국의 현실은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이가 지방에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이보다 더 부자임. 그게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는 좌파 정부가 별인 일임. 문재인 정부는 둘 중에 하나였음. 정책 면에서 정직하지 못했거나 아님 너무 무능했음.

- 한국에서 소득 양극화 개념은 매우 친숙함. 이는 소득 양극화를 놓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임. 하지만 공간 양극화에 대해선 놀라우리만치 무관심함. 하지만 한국에서 소득 양극화보다 공간 양극화가 더 심각함. 문재인 정부는 공간 양극화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음.
-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2592만5799명을 기록해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84만9861명의 절반을 넘어섬.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년 동안 21.3%가 늘어난 것임. 2020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수도권 비중도 52.1%를 차지함.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이 경제력과 인구 면에서 비수도권 전체를 앞지르며 ‘지방소멸’ 가능성성이 제기되는 중임.
- 공간 양극화는 반드시 소득 양극화를 의미함. 반면 소득 양극화가 반드시 공간 양극화를 의미하지 않음. 공간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보다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 소득 양극화는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를 잘 보완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간 양극화는 어림없음. 한번 공간 양극화가 진행되면 사회간접자본과 공적 인프라가 한 곳에 쏠리기 때문임.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서 공간 양극화 문제를 되돌릴 수 없음. 한국의 정책연구자들이 소득 양극화보다 공간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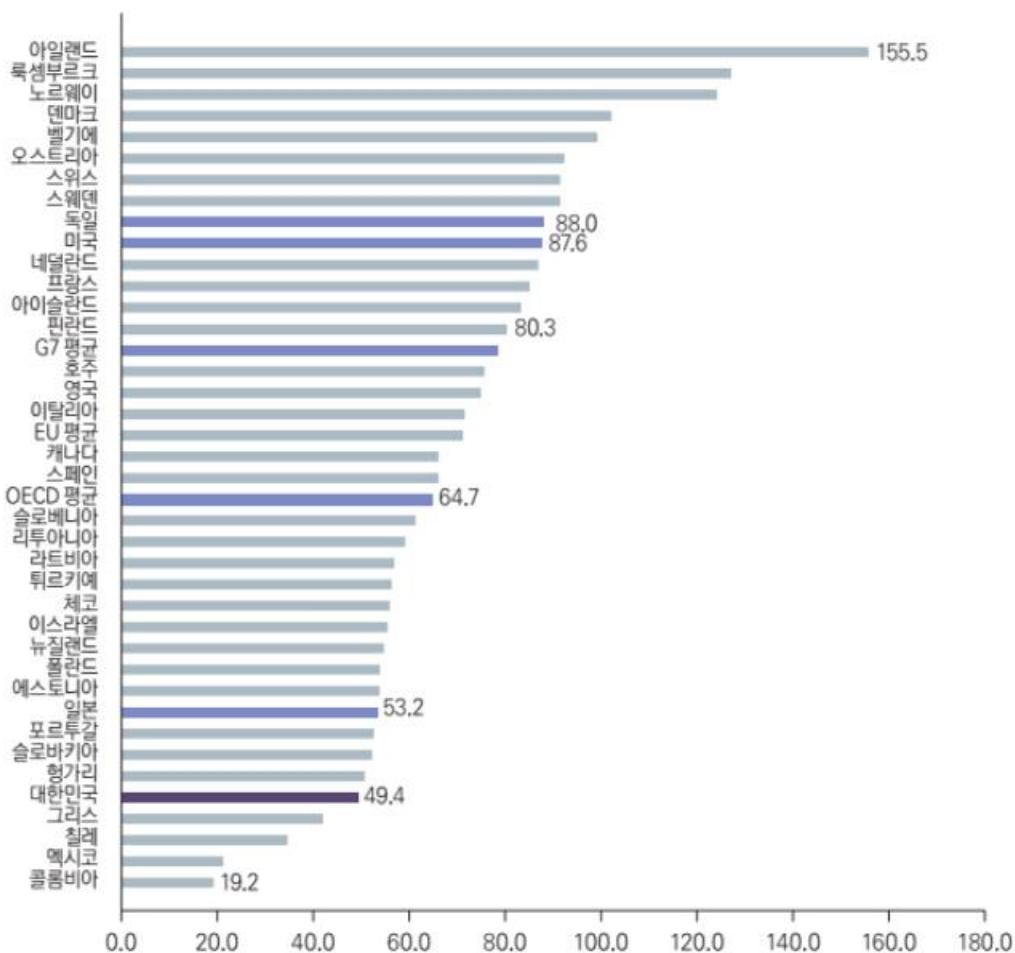


4장 노동 정책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 면에서도 역주행이었음.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배경엔 높은 노동생산성도 역할을 했음.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 8월 17일 발표한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OECD 38개 국가들 중에 최하위권이었음.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들은 그리

[그림 II-75] 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비교(2022년 기준)

(단위: 달러(ppp))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경제' 갈무리

스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4개국에 불과했음.²¹⁾

21) 2023 8월 22일 노컷뉴스 기사 참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왜?”,



게임이론 시각에선,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을 도덕적해이로 지목할 수 있음. 모든 집단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있음. 즉, 같은 직장 내에 성실 근로자들과 불량 근로자들이 혼재해 있는 것임. 성실 근로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사용자가 아니라 그 옆에서 근무태만을 저지르는 불량 근로자들임. 근무태만을 저질러도 같은 처우를 받는 걸 보면 성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결국 그 직장 내에 모두가 근무태만을 저지르게 되는 것임.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직접적인 이유임.

-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양대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뜻함. 그 핵심 내용은 업무 성과가 낮은 근로자 해고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그 ‘양대 지침’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 그 양대 지침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불러오며 방만한 공공부문을 효율화하는데 일부 기여했음.
- 문재인 정부는 그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렸음.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 의지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신입사원 채용을 늘릴 계획이었음.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양대 지침’ 폐지로 인해 정책이 달라지자 기업들의 채용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음.
- 노동개혁은 세계적 추세임. 독일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노동개혁 정책을 양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어받고 있음.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갔음.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임.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997890>



걱정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친노조 정책을 추진, 노조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했음.

-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근로시간이 긴 편이긴 하지만 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규제한 게 문제인 정부였음. 주 52시간은 기본 근무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최대 근무시간 12시간을 더한 것임. 각종 휴식 시간, 식사 시간 등은 그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원래도 기본은 주 5일제 40시간이었고 그 이상은 자율 선택이었음.
- 문제인 정부는 ‘양대 지침’ 폐기를 통해 불량근로자 해고를 어렵게 해놓았음. 그에 따라 불량근로자 선별이 더욱 어려워짐. ‘옥석가리기’가 없는 가운데 근로시간을 무작정 단축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가장 불량한 근로자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가장 근면한 근로자가 됨.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음.

1. '특별전형'

- 문제인 정부에서 해고자가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음. 대표적인 게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임. 그들은 2004년 해고됐지만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고 패소했음. 하지만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승무원들이 모두 KTX로 복귀했음. 이는 게임이론 시각에서 스크리닝 즉, ‘옥석가리기’를 외면하고 노동시장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조치로 파악할 수 있음. ‘친 노동자’ 정책이 아니라 ‘친 노조’ 정책임. 노동자와 노조는 전혀 다름. 노동자 개인은 교섭력이 미약하지만, 노조는 엄청난 교섭력을 보유함. 따라서 큰 정치적 ‘렌트’를 얻을 수 있음. 한국에선 거대 노조를 보유한 직업군들이 ‘정규직화’되거나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음. 정치가 노동시장을 통제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공정’을 강조하면서 역설적이게 ‘정규직 특별전형’을 시행했음. 바로 ‘인국공 사태’도 그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특정 직군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인데 논란과 함께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 정규직은 공개채용이 원칙임.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특별전형’을 단행한 것이어서 ‘공정’과 ‘평등’ 정신에도 어긋남.

- 문제의 본질은 공공부문의 비효율화임. 한국의 공공부문은 도덕적 해이와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인해 비효율의 상징임. 재능과 노력을 두고 ‘옥석 가리기’ 없이 똑같이 보상하겠다는 건 ‘시장실패’를 가져오게 됨.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기 때문임.
- 기여한만큼 보상을 해주고 더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경제의 기본원리임.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특별전형’을 통해 그 원리를 깨뜨렸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5년간 370개 공공기관에서 10만172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음. 그 5년간 정규직 전환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음.
- 한국전력공사 다음으로는 문재인이 직접 방문, ‘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894명이었음. 이어 한국도로공사 7563명, 한국철도공사 6230명, 한국공항공사 4162명, 한국마사회 3341명, 강원랜드 3299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952명, 한국수력원자력 2312명, 중소기업은행 2145명 등이었음.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많은 갈등이 일어났음.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친인척에



채용 비리가 많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8년 12월 3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채용 실태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음. 감사를 받은 기관은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곳이었음.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천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였음이 밝혀짐.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천 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음.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19.1%(246명)에 달함.²²⁾

- 정규직은 무기 계약직보다 훨씬 어려운 채용절차를 거쳐야 됨. 상대적으로 쉽게 채용된 무기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정규직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근로의욕이 감퇴될 수 있음. 결국 소동 끝에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행정소송은 각하됐음.
-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신규채용은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17년 2만2195명에서 2018년 3만3716명, 2019년 3만3447명, 2020년 2만7490명으로 계속 증가했음. 그러한 공공부문 신규채용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게 아님. 단순히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임. 그리고 공공부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춘 것이란 평가가 가능함.
-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정부지출 증가라고 파악할 수 있음. 대통령이 ‘신호’를 내리고 그에 따라 공공부문이 채용을 늘리는 것을 두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할 경제학자는 없음. 그러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필요한 재정은 연 8조원 가까이 됨.

22) 2019 9월 30일 연합뉴스 기사 참고, “서울교통공사 일반직전환 15%가 친인척… ‘사장, 해임 등 조치’ ”,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190930061751001>



2. ' ' 공공기관장들

정부를 이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에게 협조는커녕 오히려 방해함.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게 한 사례임. 황당한 건 그 사고방식이었음. 후임 대통령이 뽑히고 인수위가 꾸려졌던 마당에, 곧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강조한 건 상식 밖임. 그건 ‘게임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 ‘평면적 사고’만을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여기서 ‘평면적 사고’란 모든 걸 ‘동시적 게임’ 상황으로 보는 것을 의미함. ‘동시적 게임’엔 ‘시간’이란 변수가 없음. 하지만 권력 이양은 ‘시간’을 변수로 함. 그래서 ‘순차적 게임’인 것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를 미리 하는 이유이기도 함. 만약에 권력 이양이 ‘동시적 게임’이라면, 선거를 미리 할 이유가 없음. 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 대선을 치르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그날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새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하면 됨. 하지만 그렇게 할 순 없음.
- 물리학적으로 물체가 멈추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게임이론 시작에서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활동도 멈추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함. 규모가 클수록 멈추기 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비슷한 논리로 작동을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함. 그렇기에 퇴임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부임할 시간을 주는 것임. 바로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임.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미리 뽑는 직접적인 이유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라고 주장했던 그 시간은 ‘연속성’을 위해 존재할 뿐이었음. 하지만 그는 퇴임을 준비하고 부여된 시간에, 임기를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인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고 도의에도 어긋남.



NBA 경기를 보면 점수 차가 큰 상태에서 게임 종료 시각이 다가오면 선수들 플레이가 느슨해지고, 시간은 종료되지 않았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경기가 끝난 것처럼 행동함. 시간이란 형식은 남아 있지만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없기에 플레이가 의미가 없고, 플레이가 의미가 없으면 경기가 끝난 것과 다름없기 때문임. 그렇기에 경기가 끝난 것처럼 행동하며 코트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임.

- 당시 문재인 측의 주장은 이런 식이었음. 말 그대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코트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와일드 플레이’를 했던 격임. ‘알박기’ 인사가 바로 그 ‘와일드 플레이’에 해당함. 떠나라고 주어진 시간에 상대 선수에게 ‘와일드’ 플레이를 가하는 건 매우 비신사적이고 어리석음.
- 당시 문재인이 ‘순차적 게임’을 이해하지 못해 ‘평면적 사고’만을 한 결과, 그렇게 처신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이가 ‘순차적 게임’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단순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임. 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즉, 고의성이 의심됨.
- 문제는 ‘사익추구’임. 대통령을 뽑아 임기를 부여한 건 사익추구를 최소화하고 공익추구를 최대화하라는 이유일 것임. 하지만 문재인이 ‘와일드 플레이’를 통해 ‘알박기’한 인사들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엉터리 소프트웨어로 작용할 수 있음. 연봉과 판공비 외에도 그들이 추구하는 부정사익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건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임.

3. 실현

-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 기업은 돈을 버는 조직이기에, 누가



기여하고 누가 기여하지 않는지 그 정보가 쉽게 드러남. 하지만 세금 걷어 ‘공익추구’라는 명분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그 정보가 쉽게 드러나기 어려움. 그렇기에 ‘역선택’이 보편화될 수 있음.

- 역선택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꼭 떠나야 할 사람들이 꼭 남고 꼭 남아야 할 사람들은 꼭 떠나는 현상을 말함. 기업은 ‘역선택’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경영자들은 근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들을 찾아내는데 부지런하기 때문임. 경영자들이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임. 즉,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임.
- 경영자가 추구하는 사익과 회사의 이익이 완전히 부합함. 즉, 경영자는 그 회사라는 법인이 ‘큰 부자’가 되길 어느 누구보다 간절히 바람. 그렇기에 사람을 뽑을 땐 능력 있는 이들을 뽑으려 하는 것임. 그러한 자세가 회사를 이롭게 하고, 아담 스미스 사상에 입각해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고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함. 즉,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경영자는 정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결과임. 그러한 시스템이 가장 견고한 시스템임. 경영자들에게 편하게 ‘놀라고’ 해도 ‘놀지’ 않음. ‘돈 벌기’에 게으른 ‘상인’이 없는 것과 비슷함. 선진국에서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임.
- 반면 공공기관은 정반대임.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음.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할 뿐임. 게임이론 시각에서, 모두가 ‘주인’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주인’이 없다는 뜻임.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 ‘사유(私有)’제도는 배제성을 부여함. 주인 없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구하는 사익과 그 기관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음.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갖추고 보다 청렴해지고 직원들이 친절해지려면, 무엇보다 기관장이 보다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해야 함.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쓴씀이를 아끼고, 가장 늦게 퇴근해야 할 것임. 하지만 자신의 임기가 정해졌기에 그렇게 솔선수범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씀씀이를 아끼는 공공기관장은 드뭅니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그 이유는 주어진 예산을 자신이 직접 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만한 공공기관장 밑에서는 태만한 직원들이 가장 수혜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기관 전체가 태만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 공공기관의 현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것입니다.

- 그렇기에 밀튼 프리드먼이 ‘정부의 크기를 줄이라’고 일갈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인사(人事) 문제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못 되고 있는 건 기관 건물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사람들 생각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 사고를 갖춘 이들이 기관장을 맡아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알박기’한 공공기관장의 수가 무려 59명에 달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들 임기는 2024년까지인 경우가 28명이고, 2025년까지인 경우가 14명입니다. 기관장 ‘알박기’는 문재인 정부 평판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전문성 없는 이들을 ‘알박기’해 ‘완장’을 달아주면, 그 기관 전체가 평판을 잃게 됩니다. 한국은 ‘하드웨어’ 문제보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 ‘알박기’ 기관장들이 바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악성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깔릴 프로그램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 그 컴퓨터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4. ‘나라’, ‘가족회사’ 선관위, ‘끼리끼리’ 네트워크

- 대한민국의 ‘줄의 나라’입니다. ‘공정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음서채용’



해 큰 논란이 일었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알박기’한 선관위원장 휘하 선관위가 대규모 부정을 저질러 감사원에 적발됐음. 감사원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비꼬았음. 2024년 4월, 감사원이 ‘채용비리’ 관련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상태임.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모든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00회가 넘는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는 것임.

- 고발된 선관위 전 사무총장 김 모 씨의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고 함. 그 ‘세자’ 면접 때 만점을 준 사람은 그 ‘세자’ 결혼식 때 축의금을 접수했던 선관위 직원이었다고 보도됨. 그 후임 사무총장 박 모 씨는 당시 광주 남구청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2022년 3월 전남 선관위에 경력 채용되도록 했음. 방식은 더욱 황당했음. 외부 면접위원이 점수도 기재하지 않고 서명을 해 평정표를 넘기면, 인사담당자가 사후에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식이었음. 점수를 ‘백지 위임’한 격임.²³⁾
-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던 모 씨의 자녀도 2021년 10월 경력 채용됐는데, 당시 면접위원이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했다고 함. 차후 인사담당자가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였음. 그리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서류함을 ‘갈아 버리라’고 지시했음.²⁴⁾ 평정표를 연필로 썼다는 건 선관위가 비리의 복마전임을 응변해 줌.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임.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권력의 정당성 때문임. ‘문재인 알박기’ 선관위는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하지도 못했고 ‘금수저’ 자식들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만 창출했을 뿐임.

23) 2024 4월 30일 중앙일보 기사 참고, “前사무총장 아들 ‘세자’ 라 불렸다… ‘충격적 ‘선관위 채용비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172>

24) 2024년 4월 30일 중앙일보 기사 참고, “前사무총장 아들 ‘세자’ 라 불렸다… ‘충격적 ‘선관위 채용비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172>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임. 그 비즈니스는 밀천이 들지 않고 오로지 ‘땅 짚고 혜엄치기’식 경영이여 고용 창출이 없음. 좌파 비즈니스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함. 좌파 세계관은 세상 모든 걸 ‘계급투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그에 따른 경제 정책은 주로 ‘나눠 먹기’가 될 수밖에 없음. 성장은 생각지 못함.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원 배분 메커니즘을 ‘계급투쟁’으로 치환하기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임. 그러한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침투하면, ‘끼리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기관을 사유화하기 쉬움.

- 선관위가 ‘가족 경영’ 회사가 된 배경엔 엉터리 경영 밀천 즉, ‘세금’이 있음. ‘가족회사’라고 불렸다면, 이는 비리의 복마전이란 뜻이 될 수 있음. 선관위뿐이 아님. 사실 한국 대부분의 공공기관들 사정은 비슷함. ‘가족회사’가 아니라면, 특정학교 ‘동문회 회사’, 또는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계모임 회사’에 가까움. 그 기관들 공익 추구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경영’이란 비아냥을 들을 만큼 특정 인맥 중심으로 철저히 사유화된 게 문제의 핵심임. 그에 따라, 효율성 ‘제로’ 그리고 생산성 ‘제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
- 지방 공공기관은 더 심각함. ‘위인설판’식 맞춤형 채용이 빈번하고 세금 탕진을 통해 ‘끼리끼리 네트워크’ 이윤 추구 목적의 ‘구락부’와 비슷함. 매관매직, 일자리 품앗이 등 ‘정규직 특별전형’이 혼함.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고비용 저효율’ 교과서임. ‘공돈’ ‘쌈짓돈’이 넘쳐나고 예산 쓰기 바쁨. 적자를 호소하면서 인재 채용 규모를 더 늘림. 그러한 공공부문이 문재인 정부 시절 더욱 비대해졌음.
-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는 형식에 불과할 때가 많음. ‘서류’는 ‘밀장빼기’고, ‘면접’은 ‘짜고치기’식임. 같은 공무원이어도, 부모 신분에 따라 ‘흙수저’ 출신과 ‘금수저’ 출신은 천양지차임. 힘든 부서를 돌며,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는 공무원들은 대개 ‘흙수저’ 자식들이고, 편한 보직 받고 쾌속 승진하는 경우는 대개 ‘금수저’ 자식들임. 한국에서 필기시험을 중시하는 건 정실 배제 개입을 막기 위해서임. 서류와 면접



치러지는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 그 수혜자는 ‘줄’이 있는 사람, 피해자는 ‘줄’이 없는 사람임. 문재인 ‘알박기’ 선관위원장 휘하 선관위 채용 비리가 바로 그 귀납적 사례임.



5장 정보왜곡: 국가통계조작

1. 중요성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 지표인 집값 소득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보’의 역할은 두 번 강조해도 부족함. 게임이론 시각에서도 ‘정보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메커니즘을 제시함.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22년 12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2018년 8월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될 때 소동이 벌어졌음.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그 통계 표본을 문제 삼아 황 청장을 경질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음. 이후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소득주도 성장론자 홍장표와 함께 책을 쓴 인물임.²⁵⁾ 황수경 전 청장은 이임식을 끝내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일을 잘 했다. 윗선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경질된 것 같다”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음. 새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 그러한 발언은 통계청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할 수밖에 없음.
- 논란의 발단이 된 표본 문제는 2018년 8월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통계였음. 애초에 통계청은 낮은 응답률을 이유로 가계동향조사를 없애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

25) 대통령은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바 있음. 강신욱 전 청장은 문재인이 직접 언급한 그 보고서를 쓴 인물로 알려졌지만 강 청장은 그 보고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쓴 보고서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세부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 조사를 유지했음. 그리고 통계청은 정부의 지시대로 원래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려 조사를 진행했는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더 낮아진 결과가 나왔음. 그리고 통계청장이 경질됐음.

- 통계청장이 갑작스레 경질되는 경우가 드묾. 역대 통계청장들의 재임 기간은 대부분 2년 안팎이었음. 황수경 청장은 13개월만에 경질되었음. 통계청장이 갑작스레 바뀐 건 11대 김대기 청장 이후 약 10년 만인데 당시 김대기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제2차관에 내정됐기 때문임.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경제지표가 나왔다는 이유로 통계청장이 경질될 수 없음.²⁶⁾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음. 신임 강 청장이 같은 날 취임식에서 “특정해석을 염두에 둔 통계 생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음.
- 통계청장 경질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통계청 내부 게시판에 올려진 통계청공무원 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서가 보도됐음.²⁷⁾ 그 성명서엔 “현 제도상 통계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한은 총재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됐다...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생한 정부의 인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다...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는

26) 통계청장이자 2019년 한국경제학회장 취임을 앞둔 이인실 교수가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통계청장 경질은 ‘충격적’이고 문재인 청와대가 ‘자기확신’에 빠진 것 같다면 비판했음 (2018년 8월 27일 매일경제신문 기사 참고, “통계청장 경질 충격…독립성 훼손 우려”, <https://www.mk.co.kr/news/economy/8451974>). 전직 통계청장인 유경준 교수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입증해보려는 조급증이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판했음 (2018년 8월 28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참고, “유경준 前 통계청장 ‘면접 방식으로 소득통계 정확도 높였는데… 표본 오류 주장 어이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002390?nType=RANKING&sid=111>).

27) 서울경제신문 2018년 8월 29일 기사 참고, “통계청장 교체, ‘공정성·중립성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381815?sid=101>



담겨 있음.

- 2018년 9월 1일에는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을 자주 불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고 대답했음.²⁸⁾ 인터뷰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음.

질문: 황 전 청장이 퇴임하면서 ‘윗선 말을 잘 듣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에 불리한 통계가 나오면 윗선의 압박 있었나.

- 최 노조위원장: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절차대로 공표하였음에도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 결국엔 청장까지 교체했다.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 개입이나 압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청와대에서 자주 자료 요구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갑질 아니냐.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 질문: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에 직원들이 독립성 훼손까지 우려했나.
- 최 노조위원장: “과거 정부에서도 통계 발표를 하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긴 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주 불려가서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 우리도 우리 업무가 있는데 청와대나 기재부 같은 곳에서 전화가 수도 없이 와서 전화 받다가 시간을 다 뺏기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니까 내가 황수경 당시 청장한테 가서 ‘직원

28) 2018년 9월 1일 기사 참고, “[인터뷰]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경제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했더니 청장 교체’”,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8311



너무 자주 불려가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 청와대 쪽에도 노조의 의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위해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음을 시사함.

2. 감사 결과

- 2022년 12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소득·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 중이라고 발표했음. 감사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도록 표본을 조정하고 조사원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의 정황을 파악했음.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동향 지표 등이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된 정황이 발견된 것임.
- 그뿐 아니라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인사 상 혜택 등 대가가 오간 정황도 포착했다고 발표함.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짐.²⁹⁾통계청 내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이를 반대했던 직원이 좌천됐다는 의혹도 추가됐음.
-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음.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 통계 수치 조작 또는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함. 감사 결과 문재인 취임한 다음 달인 2017년 6 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임.

29) JTBC 2022년 12월 13일 기사 참고, “[단독] ‘문 정부,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감사원 조사” , <https://news.nate.com/view/20221213n32254>



집값 통계와 관련,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주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만 최소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을 하도록 했다고 함.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함.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임.

-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까지 하자 부동산원 측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했다고 밝혔음. 그와 같은 유출 및 조작 행위는 후임 정책실장들 재임 시절에도 계속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음. 집값 통계뿐만 아니라 2019년 근로형태 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 소득주도 성장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 등도 조작했다고 함.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후에도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 가계소득 수준이 높아져 보이게 했다는 것임.
- 2017년 2분기에 국민들의 가계 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자 통계청은 가계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을 바꿔서 소득이 전년도 2분기에 비해 1.0% 증가했다는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함. 그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법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높여 발표했음. 그 기간 근로 소득은 감소하고,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있었지만 통계청은 그 결과도 뒤집어 근로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분배는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음. 문재인 정부는 통계 지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통계청에 산출 방식을 바꾸도록 한 것임.

3. 관리한 ‘통계치’

-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음.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감사원 발표에 반발, 자신들의 정책포럼에서 성명을 내고 ‘감사조작’이라고 주장했음.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고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실무자들에게까지 엄청난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음.
- 부동산 관련 지표가 좋지 않으면 그 실무 관료들을 주간 단위로 청와대로 소환,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러한 회의 자체가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 집값이 오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며 기뻐했다고 함. 문재인 청와대는 통계 조작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음. 조작 사실을 처음 제보한 이들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었음. 그들은 2019년 가을 경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했지만 같은 해 11월경 그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관련 부서에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고만 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황수경 전 청장 재직 중에도 일부 직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통계 조작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부동산원(정부)과 KB부동산(민간)의 부동산 가격 통계를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때 민간과 정부의 통계 차이가 이명



정부 때의 9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음. 이명박 정부 때는 0.4%p, 박근혜 정부 때는 2.2%p, 문재인 정부 때는 36.1%p, 윤석열 정부 때는 0.3%p 차이가 났음. 이는 문재인 정부가 통계조작을 했다는 방증임.

-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홍장표가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모아 통계 결과를 뒤집기 위해 밤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 결과 가계소득 분배는 악화되었지만 개인 근로소득 분배는 개선되었다는 재해석을 내놓았음.
- 직원들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 변조한 정황도 드러났음. 근거가 빈약한 통계 산출 방식을 억지로 보완키 위해 전산망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 외주 업체 직원을 불러 특정 방식의 프로그램을 전산망에 집어넣게 했다는 것임. 논란이 일어나자 2023년 10월 13일 국토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토부 1급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시킨 것으로 드러남.
- 2023년 10월 19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 아래 시세 조사 때 아파트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과거 집값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음. 부동산 시세 통계 왜곡을 막기 위해 현장 조사원이 집계한 가격 통계를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은 내부 규칙을 바꿔 그 검증 절차를 없앤 것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는 각 지사에서 조사한 가격을 본사에서 검증하는 조항(세칙 제14조1)이 존재했다고 함. 하지만 부동산원은 2017년 11월 업무세칙 개정을 통해 검증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정권 교체 후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2년 12월 업무세칙을 재개정해 검증 조항을 되살렸다는



- .
- 통계 조작과 관련된 부동산원 직원들이 대거 승진했던 사실도 드러났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이 이뤄졌던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부동산원의 주택통계 담당 부서의 실무 책임자 5명이 2019년부터 2023년 1월 사이 모두 1급으로 승진했다고 함.
 - 그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60년의 예상 국가채무를 GDP 대비 153%에서 81.1%로 절반 가까이 축소 왜곡한 사실도 드러났음. 문재인 정부 당시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까지 100%를 넘을 가능성이 국무회의에서 언급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그 뒤로 수치가 81.1%로 낮아진 것임. 당시 IMF 등 국제경제 전문 기관들은 한국 정부 정책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2060년 한국의 채무비율은 200~220%라고 전망했었음.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임.



6장 기타 ‘역주행’ 정책들

1. ‘ ’ 과 사회적 신뢰 상실

스탠포드 대학교 프랜시스 후쿠야마 석좌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 말고 또 다른 게 있음. 바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임. 그 사회자본의 형질은 ‘신뢰’임. 그의 분석에 따르면, 후진국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신뢰반경’이 좁다는 것임. 즉, 직접적 인연으로 묶여진 권역 내에서는 끈끈한 신뢰가 발휘되지만 그 권역 밖에 대해서는 불신감으로 일관한다는 것임.

- 한국으로 치면 그 좁은 ‘신뢰반경’은 혈연, 지연, 학연일 것임. 한국은 ‘저신뢰’ 나라임. 실증적 근거가 있음. OECD 국가들 중에 사기사건이 가장 많고, 김웅 전 국회의원의 ‘검사내전’ 내용에 따르면, 공식 신고 된 사기사건만 평균 2분마다 한 건이라고 함. 거기에 또 하나의 나쁜 평판이 추가될 수 있는데 ‘정쟁’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임.
 - 문재인과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했음. ‘검수완박’을 하면 한국의 정치도 망하지만 경제도 망할 것임. 부패가 창궐할 가능성 때문임. OECD에선 ‘부패지수’를 발표함. 그 지표로만 따지면, 한국 순위는 매우 높지 않음. 부패가 적발되지 않으면 그 순위는 낮게 나올 수 있음. 하지만 부패가 없는 게 아니라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규모의 부패’라고 볼 수 있음. 경제학에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다. 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평균 생산비가 감소한다. 한국의 부패는 규모가 크고 구조적이어서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권력형 부패임. 현재 한국은 ‘규모의 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부패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패 은폐가 더 쉬워진다. 그



부패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해 먹기가 더 쉬워진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개리 베커의 ‘범죄 경제이론’과 관련한 논문³⁰⁾을 보완할 필요가 제기됨. 그렇기에 OECD 가 한국의 ‘검수완박’ 입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우려하는 것임.

- 정의를 말하며, ‘검수완박’을 외치는 이들은 경찰이 ‘도덕심’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함. 검찰 조직과 경찰 조직 중 어느 편이 부패에 더 취약할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함. 게임이론 시각에선, 경찰 조직 쪽이라고 말할 수 있음. 문제는 도덕심이 아님. 부패사건을 맡는 검사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실은 전문직 종사자들로 볼 수 있음. 생계 걱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생계형 공무원일 수록 부패와 청탁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음. 유인체계로 파악할 때, 경찰 조직이 소신껏 일하기에 더 어려운 환경일 수 있음.
-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쪽이 보다 도덕적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움. 하지만 유인체계를 따져 보건데, 검사는 청탁을 물리치고 큰 사건을 해결하면 인기를 얻고 좋은 평판을 쌓아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음. 변호사 개업 시 더 큰돈을 벌수도 있음. 청렴하고 강직한 ‘모래시계’ 검사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 정치인으로 성공한 경우도 많음. 그리고 억울한 이를 도우려면, 용기도 필요하지만 전문적 지식도 필요함. 물론, ‘용기’와 ‘이기적 동기’는 구분이 쉽지 않음. 그 경우, 중요한 건 결과임. 결과가 좋으면 신뢰와 평판이 쌓임. 그렇게 쌓여진 신뢰와 평판이 바로 무형자산이 되는 것임. 신뢰와 평판은 ‘도덕심’의 결과도 되지만, ‘전략’ 선택의 결과도 됨.
- ‘도덕’이란 말은 좋지만 사회는 도덕심보다 유인체계로 유지될 수 있음. ‘검수완박’은 자칫 그 유인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음. 게다가 경찰 조직은 검찰 조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정보량도 많고, 심지언 무력수단도 갖추고 있음. 그 조직을 이끄는

30) Gary Becker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2): 169-217.



엘리트들 중심으로 조직 이기주의가 없다고 전제할 수 없음. 그 상황에서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자칫 통제 불능 권력 집단이 출현할 가능성도 상존함. 그 경우, ‘검수완박’의 직접적 피해는 서민들이 입게 될 것임. 서민들에겐 기소권보다 수사권이 더 무서울 수도 있음.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인들을 겁에 떨게 한 건 기소권이 아니라 일제 경찰의 수사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검수완박’은 권력 분점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의미함.

- 민주주의 사회에선 어디에서나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적용됨. 검찰의 힘이 너무 비대하다면 견제할 장치를 만드는 게 타당함.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균형을 맞추어야 의미가 있음.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다른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게 하기에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임. 유인체계로 분석할 때, ‘검찰 공화국’이란 말은 허구임. 그런 말은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불과함. 죄 없는 사람들에겐 ‘검찰 공화국’이란 말 자체가 생경함. 반면 ‘운동권 공화국’은 허구가 아닐 수도 있음. ‘검찰 공화국’의 통치 이념은 ‘법’이 되겠지만, ‘운동권 공화국’의 통치 이념은 주관적 신념 또는 정치적 ‘호불호’일 수밖에 없음. 즉, 누군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검찰 공화국’은 경계가 분명함.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임. 아무리 악당을 잡아 가둔다 해도 법에 의거해야 함. 반면 ‘운동권 공화국’은 경계가 불분명함. 그렇기에 감정과 느낌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판단기준이 정치적 ‘호불호’인 것임. 즉, 자신들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면 온정을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음. 고무줄 잣대임. 그게 바로 ‘운동권 공화국’ 폐해의 시작점이 됨. ‘끼리끼리’ 네트워크에 의존해 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패가 창궐하고 자유시장 시스템이 망가짐.
-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온 이들 중에 운동권 ‘줄’이 없는 이들은 ‘운동권 공화국’ 보다 ‘검찰 공화국’을 선호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민주당은 2024 총선에서 거대의석



확보하자 이젠 ‘검수완박’을 넘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시장경제는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근간은 ‘법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파의 선호대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의도는 참 황당함. 검찰청이 폐지되면, 가장 수혜자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과 연결된 ‘줄’을 가진 이들일 것임.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운동권 출신임. 그들에 의한 국정운영이 바로 ‘운동권 공화국’인 것임.

- 더구나 ‘운동권 공화국’이란 말은 서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표상함. 한때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베풀어줄 거라고 믿었건만, 그들은 집값 폭등 사태를 불러와 오히려 서민들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음.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공화국’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일극 체제’ 역시 ‘운동권 지배 정당’이라고 봐야 함.

2. 정책

-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 최대 기업 삼성전자를 적대시했음. 삼성에 대해서 정권 초부터 2020년 말까지 4년간 50여차례 면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고 430여 차례 임직원 소환 조사를 벌였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560일 넘게 감옥 생활을 했음. 2017년 2월17일에 구속되어 2018년 2월5일까지 감옥에 있었고, 2021년 1월18일에 다시 법정 구속되어 207일 동안 추가로 감옥 생활을 했음.
- 경영자의 리더쉽은 그 기업의 생산성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침. 표준경제학에선 산출량이 생산기술과 요소투입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각 기업



생산성 수준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 생산성 차이의 근원을 놓고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Syverson의 문헌연구³¹⁾가 일목요연한 정리를 해주고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기술과 아울러 경영기술(Management Technology)³²⁾도 중요함. 경영기술은 기업조직과 관련 깊은데 기업 내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권위(authority)’에 대한 아기온과 티롤의 연구³³⁾가 돋보임. 국제경쟁이 증가할수록 기업 내 권력과 통제권 배분이 기업 실적에 미칠 수 있음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음.³⁴⁾
-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 중이던 2019년 4월,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골자로 한 ‘반도체 비전 2030’을 내놓았음. 하지만 다시 구속되어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파운드리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간의 세계 시장 점유율 격차는 2019년 1분기 29% 포인트였음. 2023년 2분기에는 36.9%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졌고, 2024년 2분기에는 50% 이상 격차가 남.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 탄압을 받았던 삼성전자 가 ’경영기술(Management Technology)’ 면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31) Syverson, C. (2011), “What Determines Productiv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9(2), 326–365.

32) Bloom, N., Sadun, R. and J. V. Reenen (2017), “Management as a Technology?”,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16–133.

33) Aghion, P., and J. Tirole. (1997), “Formal and Real Authority in Organiz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 1–29.

34) Marin, D., and T. Verdier. (2008), “Power Inside the Firm and the Market: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6, 752–88.

Martin, D., and T. Verdier. (2009), “Power i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Industry Equilibrium”, Economic Theory, 38, 437–64.



지난 2018년 대만의 1인당 GDP는 2만5825달러, 한국은 3만3447달러였음. 2023년 4월 28일 대만중앙통신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2천811달러, 한국은 3만2천237달러로 4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추월했음. 그 추월기가는 문재인 집권 기관과 중첩됨.

3. 지역차별

- GM 군산공장은 1997년에 완공, 주로 준중형급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며 전북 경제에 큰 봇을 했음. 2005년 10월, 디젤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했고 생산 차종이 더 다양해졌으며, 인근에 과거 대우 계열이던 타타대우상용차가 위치해 집적화를 이뤄가는 중이었음. 자동차 생산단지는 지역 내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고 주변 자영업자들 매출에도 크게 기여했음.
- 2009년 파산위기에 처할 뻔한 GM은 브랜드 정리, 직원 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시작했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018년 2월 13일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확정지었음. 생산과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그해 6월 1일 완전히 폐쇄되었음.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인근에 위치했던 현대중공업도 가동도 중단된 상태였음.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전북 지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고 많은 전북도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음.
- 과거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향토기업’과 다름없던 군산공장이 문을 닫고, 지역의 고용은 물론 상권과 부동산 시장 등 모두 연쇄 타격을 입음. 당시 GM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2000명. 군산공장과 인근 130여곳의 부품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직원수는 1만2000여명이었음.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5만명에 이를. 군산시 인구가 26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GM 군산공장과 직접 관련된 것임.



2017년 7월에는 군산에 있던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았음. 현대중공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0년 3월 군산에 조선소를 열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7월 여러 이유로 폐쇄조치가 내려짐. 그에 따라, 군산조선소 관련 50여개의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관련 근로자 5000여명이 실직했음. 문재인 정부 시절, 현대중공업과 GM 군산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1년 만에 2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 현대중공업과 GM 군산공장은 군산시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했었음.³⁵⁾

-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던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음.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대응방식은 황당했음. 가동 중단 직전 도민 100만 명이 조선소 존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송하진 당시 전북도지사가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집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이는 매우 이례적임. 대개 그 지역의 산업체가 폐쇄되는 경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 전북도와 군산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총리실, 중앙부처에 조선소 재가동을 46차례 건의했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총결의대회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본사와 국회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음. 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의 대표, 이낙연 총리 이후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군산을 방문해 재가동 문제를 논의했지만 모두 허사였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군산 조선소 존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 소재 대우조선 조선소는 한화그룹에 매각되고 정상화되었음.³⁶⁾ 대우조선은 2015년 전후로 경영 여건이 매우 나빠졌음. 특히 2016년에

35) 2018년 2월 19일 기사 참고, “[한국GM 철수위기]⑦ ‘현대重 이어 한국GM까지’ ...충격 휩싸인 군산, 고용·상권·부동산 붕괴 우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1646.html

36) 주간조선 2022년 9월 26일 기사 참고, “대우조선해양 새주인 맞기까지...공중분해, 워크아웃, 매각 불



5조원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각돼 큰 논란을 일으켰음. 이후 계속 인수 합병이 추진되고 무산되기를 반복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반전을 맞게 됨. 대우조선 민영화 작업이 시작되고 정상화되어 2022년 한화그룹에 인수됨. 군산과 거제가 묘한 대조를 이뤘음.

"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5>



Becker, G.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2): 169–217.

Card, D, and A. B. Krueger,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772–793.

Syverson, C. (2011), "What Determines Productiv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9(2), 326–365.

Bloom, N., Sadun, R. and J. V. Reenen (2017), "Management as a Technology?", Ha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16–133.

Aghion, P., and J. Tirole. (1997), "Formal and Real Authority in Organiz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 1-29.

Marin, D., and T. Verdier. (2008), "Power Inside the Firm and the Market: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6, 752-88.

Martin, D., and T. Verdier. (2009), "Power i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Industry Equilibrium", Economic Theory, 38, 437-64.

(2020), "부동산 약탈국가", 인물과사상사.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3 대한민국 경제", 경제분석국

남성일, 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1권, 제3호, 1~19.

손낙구 (2010)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후마니타스 출판

이양승 (2021), 와일드 게임이론, 박영사

이양승 (2023), 메트로 이코노미, 타임라인

, 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KDI Focus.

최종호 (2019), “소득, 주택소유 그리고 투표선택: 19대 대선의 사례” , 비교민주주의, 제16집 1호, 189–221.

국민일보, 2018년 1월 17일 기사 참고, “‘장기 플랜 카드’ 검토한다지만… 집값 잡기는 요원”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85720>

노컷뉴스, 2023년 8월 22일 기사 참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왜?” , <https://www.nocutnews.co.kr/news/5997890>

뉴데일리, 2024년 10월 19일, “[이양승 칼럼] 노벨상, 한반도의 ‘명과 암’ 정조준: 주목하라, ‘문학상’ 아니라 ‘경제학상’ … ‘상흔’ 대신 ‘성공’ ”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19/2024101900005.html>

뉴데일리, 2024년 5월 24일, “[이양승 칼럼] 역사의 죄인 … ‘회고록’ 아니라 ‘참회록’ 써야 했다”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3/2024052300331.html>

뉴데일리, 2024년 5월 5일, “[이양승 칼럼] ‘선거관리 업무’ 도 감사하라”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3/2024050300160.html>

뉴데일리, 2023년 11월 23일, “[이양승 칼럼] 값싼 전기 맘 놓고 쓰면 안되나? 민주당, 왜 이를 막나?”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23/2023112300159.html>

뉴데일리, 2023년 10월 31일, “[이양승 칼럼]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 좌파 금수저 자식들 ‘손석희(조국)’ 인데요’ ”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31/2023103100028.html>

뉴데일리, 2023년 10월 18일, “[이양승 칼럼] 문재인의 ‘재이니즘’ , 아르헨티나 거덜낸 ‘페로니즘’ 닮았다”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7/2023101700327.html>

뉴데일리, 2023년 10월 12일, “[이양승 칼럼] 문재인 ‘알박기’ 기관장들 당장 사퇴하라 … 정권 바뀐지 17개월이나 됐다”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11/2023101100351.html>.

동아일보, 2018년 9월 12일 기사 참고, “‘고용 재난’ 8월 취업자 증가 고작 3000명…실업자



IMF 최악” .
<https://web.archive.org/web/20180915122307/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80912/91943060/1>

매일경제신문, 2018년 8월 27일 기사 참고, “통계청장 경질 충격…독립성 훼손 우려” ,
<https://www.mk.co.kr/news/economy/8451974>)

서울경제신문, 2018년 8월 29일 기사 참고, “통계청장 교체, ‘공정성·중립성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381815?sid=101>

연합뉴스, 2021년 6월 10일 기사 참고, “서울아파트값 文정부 4년간 87% 상승…참여정부보다 높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50079>

연합뉴스, 2020년 9월 28일 기사 참고, “서울 아파트값 평균 10억원 시대…2년 만에 2억2천만원 ‘껑충’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11720>

연합뉴스, 2022년 2월 28일 기사 참고, “서울 아파트값 강남권 15억원·강북권 10억원 돌파” ,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220228084200003?input=1195m>

연합뉴스, 2017년 6월 26일 참고,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 유도…비과세 등 인센티브 확대” ,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170625035100003>

연합뉴스, 2019년 9월 30일 기사 참고, “서울교통공사 일반직전환 15%가 친인척…‘사장, 해임 등 조치’ ”,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190930061751001>

일요신문, 2018년 9월 1일 기사 참고, “[인터뷰]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 ‘경제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했더니 청장 교체’ ” ,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8311

조선일보, 2018년 1월 18일 기사 참고, “[기자수첩] 실패한 부동산 정책 되풀이가 걱정되는 이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1577.html



, 2019년 1월 4일 기사 참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조선일보, 2018년 2월 19일 기사 참고, “[한국GM 철수위기]⑦ ‘현대重 이어 한국GM까지’ ...총
격 휩싸인 군산, 고용 · 상권 · 부동산 붕괴 우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3/2018021301646.html

주간조선, 2022년 9월 26일 기사 참고, “대우조선해양 새주인 맞기까지...공중분해, 워크아웃, 매각
불발”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75>

중앙일보, 2024년 4월 30일 기사 참고, “前사무총장 아들 ‘세자’ 라 불렸다… ‘충격적 ‘선관위
채용비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172>

한국일보, 2018년 8월 17일 기사 참고, “7월 취업 증가 5000명… 고용 대참사 현실화”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171386330622>

한국일보, 2018년 12월 28일 기사 참고, “수원 팔달, 용인 수지 · 기흥 조정대상지역…부산 4곳은
해제” , [hankookilbo.com/News/Read/201812281091019105](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81091019105)

한국경제신문, 2022년 3월 31일 한국경제신문 기사 참고, “文정부 공직자 재산 4년간 20% 불었
다…법제처장 350억 ‘1위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33028241>

한국경제신문, 2018년 8월 28일 기사 참고, “유경준 前 통계청장 ‘면접 방식으로 소득통계 정확
도 높였는데… 표본 오류 주장 어이없다”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002390?ntype=RANKING&sid=111>

JTBC, 뉴스룸 2022년 12월 13일 기사 참고, “[단독] ‘문 정부,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 감사
원 조사” ,
<https://news.nate.com/view/20221213n32254>



